

4대강 살리기, 어떤 '콘텐츠' 있나



마스터플랜 윤곽 - 4대강을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 9월 착공으로 본 궤도 오를 듯, 환경 논란 불식 및 자원 조달 방안 강구해야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 정부가 지난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대회'를 열면서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 현재 이 중간 보고서를 토대로 지역 설명회

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마스터플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와 설계 등을 감안하면 오는 9월이면 동시 착공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12억

5,000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나고, 4대강 수질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기준 2급수(3ppm 이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사업을 침체어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입법 예고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2조 7,000억 원 규모의 홍수 피해와 복구 비용 4조 2,000억 원을 절약하고, 일자리 19만 개 창출, 2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만 해도 1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4월 정기국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3,000억 원을 반영했다. 건설업체로서는 호기인 셈이다. 게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사업의 추가를 원하는 데다 실제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현재

속속 시공사가 정해지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포함하면 물관련 비용은 20조 원을 육박하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혜택은 대·중·소 건설업체에 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이나 중소기업과의 공동도급 비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의 무공동도급 비율을 설계시공·일괄 입찰(턴키) 공사는 20% 이상, 일반 공사는 40% 이상을 각각 의무화했다. 현재 76억 원 미만 일반공사에 대해서만 30% 범위 내에서 시행 중인 지역의 무공동도급 제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지역 업체가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 건설공사를 외지 대형 건설사가 독식한다는 불만을 가졌던 지역의 중소기업에는 희소식인 셈이다.

아직 공구 분할 등 세부적인 발주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턴키 비중이 최소 50%를 넘을 것이라 예상은 지배적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턴키 공사와 일반 공사) 비중을 말할 수 없지만 절대 공기를 감안하면 턴키 공사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중소기업 중에는 대형 건설공사에 참여할 만한 실적을 보유한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 부족 대비 수자원 확보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물 부족(2011년 8억㎥, 2016년 10억㎥)과 가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와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1억 5,000만㎥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4대강에 보 16개를 설

치해 7억 6,000만㎥의 물을 확보하고, 보는 주변 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어도(魚道) 등 친환경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 가운데 보는 한강 3개(4,000만㎥), 낙동강 8개(6억 5,000만㎥), 금강 3개(4,000만㎥), 영산강에 2개(3,000만㎥)가 조성된다.

중소 규모 다목적댐은 낙동강에 송리원(경북 영주)·보현댐(경북 영천) 건설과 안동~임하댐 연결(경북 안동)로 2억 5,000만㎥를 확보하고, 올해 ‘댐 건설 장기계획’을 변경해 신규 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송리원댐은 2억㎥, 보현댐은 2,000만㎥, 안동~임하댐 연결로는 3,000만㎥ 규모에 달한다.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 1만 8,000여 개 중 환경 영향과 수물 면적이 적은 96개의 독 높이를 높여 2억 4,000만㎥를 확보한다. 수계별로는 한강에 12개 1,000만㎥, 낙동강 3개(1억㎥), 금강 3개(6,000만㎥), 그리고 영산·섬진강에 22개(7,000만㎥)가 있다.

홍수에 선제 대응

게릴라성 집중호우 현상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만에 한번 볼 정도의 홍수에 대비한 대책 수립한다. 퇴적토 5억 4,000만㎥의 준설을 통한 홍수 소통 공간을 확보하여 홍수위를 1~5m가량 낮춤으로써 제방 누수와 하천 범람을 방지하는 신개념 치수 대책을 펼친다. 이를 통해 홍수 조절지 2개, 강변 저류지 3개, 댐 3개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96개 증고로 홍수 조절 능력 3억 5,000만㎥를 확보한다. 또 노후 제방 573km를 리모델링(보강)해 안전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낙동강·영산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신속하게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홍수위 저하 효과는 낙동강 하구둑 1.1m, 영산강 하구둑 0.3m를 높이는 것과 맞먹는다.

4대강 살리기 보 위치도



201년까지 2급수로 개선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도가 높게 유지되는 3개유역을중점관리하는등 201년까지4대강의90% 이상을 '좋은물'로개선한다. 생태복원을위해습지조성·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생태 하천 695km를 조성하고, 하천내농경지(6,400ha) 정리와친환경 영농 유도로 농약 및 비료 등의 직접 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4대강 본류에직접유입되는 지방하천을 함께 정비해 강 살리기 효과를극대화한다는복안이다.

주민들의 복합 공간으로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복합 공간으로활용해지역주민들의 생활의변화와삶의 질을향상시킬 계획이다. 강의상·하류를 잇는 자전거길(1,411km) 설치하고, 앞으로국도·지방도를활용한전국네트워크를구축해녹색교통을활성화하게된다. 도시 지역은 산책로·체육 시설 등을 설치해여가·휴식 공간 제공, 습지탐방·강변트레킹 등다양한형태의체험관광을활성화하기로했다.

강별로 '맞춤형' 개발

마스터플랜은 강별로 특성에 맞게 개발

하도록했다. 한강은남한강홍수방어대책과레저관광활성화기반마련에중점을두었다. 낙동강은물부족과홍수피해대비를 위해준설, 댐 건설등을 추진하게된다. 금강은 생태 복원과 함께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게된다. 영산강은홍수방어대책과 수질개선을중점추진한다. 이 밖에 섬진강은 자연전거길, 생태 하천 조성등자연환경보전위주의활용을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 섬진강은영산강수계에포함시켰다.

부처별로도 업무를 나눴다. 문화체육관광부는4대강주변의역사유적·유물을복원하고문화관광자원을개발하는'문화가 흐르는4대강' 사업을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강 주변 농촌 지역을 명품 마을로조성하는 역할을맡는다. 국토부는수변공간을활용해기존도시를활력있고 매력 있게정비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잖아

4대강살리기사업이일단땃을올렸지만앞으로극복해야할과제도적지않다. 벌써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설명회에서 지역 환경 단체들과 충돌이 빚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운하선도사업논란은물론환경단체들의 비판도거세질 전망이다. 방대한사업에필요한재원마련도과제다. 당연히사업계획실현가능성문제가제기된다.

우선 환경 훼손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퇴적토를 끌어내는 준설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강바닥을 뒤집어 생태계를 교란시킬수있다. 한강팔당댐준설을놓고 몇 년째 논란을 빚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두면 물이 썩을수있다는지적도만만치않다. 정부는필요에따라물을흘려보낼수있는'가동보'를 설치해강물이썩는것을막을수있다고설명했다. 또 부유 물질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해 진공 흡입식 준설공법을 활용하고, 4대

강 수질오염종합방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환경훼손논란은쉽게가라앉지않을 전망이다. 하반기착공을위해환경영향평가를부실하게진행하는것아니냐는지적은그대표적인예이다.

막대한 재원 조달도 과제다.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에 13조 9,0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역부족이라는지적도만만치않게제기된다. 4대강 정비 예산에는지천 등의 정화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추진 과정에서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비가늘어날수도있다. 수몰 지역이나 하천내 경작지보상도뒤따른다. 심지어는이들강의골재채취업도보상대상이다. 정부는원활한보상을위해4대강별보상센터를두기로했지만보상관련민원은적지않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보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있다. 고정식이 아닌움직이는 형태의가동보등의 설치에도적잖은 비용이들어가갈 것으로 보인다.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등은가동보로, 금강이나영산강등은고정보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마스터플랜수립과정에서가동보가 늘어나면비용도늘어나게된다.

수질 오염은 지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본류의정비사업을먼저 한다고수질이 나아지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년까지 4대강 주변 지천을 정비하기로 했지만 201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2급수의수질을달성하려면지천정비사업도서둘러야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4대강 살리기 사업이시작된만큼이제는차분히 실행력을높이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곤
서울신문부동산부사장